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1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25.

발 의 자 : 김도읍 · 구자근 · 이현승  
조배숙 · 장동혁 · 박성훈  
김성원 · 인요한 · 김희정  
조지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부처별 ·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· 경제 · 심리 · 고용 · 복지 · 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 11조의3).



##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3(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) ① 국가는 부처별·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·경제·심리·고용·복지·금융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(이하 “통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계획의 수립
2.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의 제공·연계 및 사례관리
3.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
4.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에 관한 조사·연구
5.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통계의 관리·분석
6. 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③ 법무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

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·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 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절차, 통합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자격, 비용 부담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1조의3(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센터) ① 국가는 부처별·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·경제·심리·고용·복지·금융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(이하 “통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계획의 수립</u></li> <li><u>2.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의 제공·연계 및 사례관리</u></li> <li><u>3.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</u></li> <li><u>4.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에 관한 조사·연구</u></li> <li><u>5.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통계의 관리·분석</u></li> <li><u>6. 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</u></li> </ol>

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③ 법무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·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 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절차, 통합지원센터에 파견할

	<u>수 있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</u> <u>자격, 비용 부담 방법 및 그</u> <u>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</u> <u>으로 정한다.</u>
--	--